

여야, 국정원 국조·NLL대화록 공개 정면충돌

與 “즉각 공개·NLL도 국조” vs 野 “先국조-後공개”

문재인 “NLL대화록 원본·녹취자료 전면 공개하자”

‘강대 강’ 대치로 6월 국회 암운…민생법안은 ‘뒷전’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와 지난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한 치도 밀리지 않은 ‘강(強) 대 강(強)’ 대치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민생국회’를 기치로 했던 6월 임시국회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즉각 공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선(先) 국조-후(後) 대화록 공개’로 맞서고 있

어 접점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3일에도 대화록을 조건 없이 공개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대화록을 공개하자면서도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면서 “이는 진실을 회피하고, 대화록을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말과 속생각이 전혀 다른 전형적 정치위장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 국조를 당장 실시하자면서 장외투쟁도 불사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 대화록을 전면공개하자고 밝힌 것과

관련,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하자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다”면서 “여야간 합의만 있다면 일반문서로 지정해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의 ‘NLL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동의해 준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면서도 “당장 필요한 것은 NLL 대화록의 공개”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의혹 국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완료되면 실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즉각 실시 요구를 반박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대화록 중 A4용지 8장 분량의 발췌본을 단독 열람한 뒤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대화록 전문 공개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 국조를 당장 실시하자면서 장외투쟁도 불

원-전국지역위원장 긴급 연설회의를 개최, 투쟁 의지도 다졌다.

전병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와 민생 입법, 장외투쟁, 그 어떤 것이 양자택 일적 사안이 아니다”며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음(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라면 국회와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장외투쟁 등 보다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한길 대표도 “공부해야 할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종교계, 시민사회, 지식인 사회로부터 온라인 네이버까지 국정조사 촉구의 함성이 연일 높아가고 있다”며 “온라인에서는 국정조사 촉구 서명운동

이 수십만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회에서는 “현법을 수호하여야 할 국정원과 경찰청이 조직적으로 국민여론을 조작해 대선에 개입하고 이를 은폐했던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국정원·경찰청 주모자, 가담자, 배후자를 절저히 수사해 구속하고 업종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가 전제된다면 대화록을 전면공개할 수 있다며 승부수를 던졌다.

한편,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 명의의 긴급 성명을 내고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과 녹취자료는 물론 회담 전후의 모든 관련자료까지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정원 사건’ 國調실시·관련자 처벌 요구

지역 대학가·정치권 시국선언 확산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광주지역 대학생·정치인 등이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21일 전남대학교 내 제1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사건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국정원 해체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정원의 반

값등록금 여론 공작 및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던 총학생회는 “검찰은 원세훈 단독 개입 여부 및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후보캠프, 새누리당 등과의 관련성을 정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이후 광주·전남 지역 대학과 연대해 국정원 항의방문, 1인 시위, 총장과 총불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전남대 자체적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의원·지역위원장들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 촉구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연설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의원 ‘NLL대화록’ 발설 위법성 논란

민주, 서상기 위원장 등 5명 검찰에 고발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 등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뒤 그 내용 일부가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일 발췌본을 열람한 직후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

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화록 내용이 일부 공개되면서 열람 의원들이 ‘발설’을 한 게 아니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NLL포기 취지발언’을 처음으로 제기한 새누리당

공공기록물관리법 47조는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대화록을 열람한 서상기 위원장 등 새누리당 정보위원장 5명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대화록을 국정원이 보관하더라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 이뤄진 이번 열람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설령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간주하더라도 대외에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비밀누

설에 해당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화록은 검찰의 판단대로 공공기록물이 때문에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 내용을 누설하지 않았다는 게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학계에서는 대화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지만, 공공기록물로 간주할 경우에는 열람 내용의 누출을 처벌할 수 있느냐를 놓고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을 상대로 물밀 작업을 벌이고 있어 치열한 경선이 예고되고 있다.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은 책임 당원으로 등록된 560여 명이다.

조준성 사무처장은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시당을 이끌기 위해 참신하고 유능한 명망 있는 인사를 선출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현 청와대 공보수석이 자리를 비워 공석이 된 새누리당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 공모에도 3명이 접수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성 사업가인 박시영씨와 하방수 전 새누리당 서구청장 후보, 김승조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장이 등록했다. 새누리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등을 한 뒤 내주 초 신임 당협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OPEN

3.3m² 당 임대료 20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2013년 10월 1일 OPEN

3.3m² 당 임대료 200만원
지하 수영장 3.3m² 당 80만원
볼링장, 골프장 3.3m² 당 150만원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캐릭스